

독대 앞둔 尹·韓... 당정 관계 새 국면 맞을까

‘지방 일자리 창출·稅감면’ 균형발전 앞장서는 국회

10·16 재보선 후 만남 관심 집중

김 여사 문제 대응책 집중 논의할 듯 韓, 제2부속실 복원 이행 건의할 수도 의정 갈등 해소할 방안 의견 교환... 입장차만 확인 댄 관계 악화 가능성



윤석열(가운데) 대통령과 한동훈(왼쪽)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지난달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소 빠격대는 듯했던 당정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앞서 의정 갈등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계속 노출하면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던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번 독대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이뤄진 배경에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론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야당이 정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잠정 중단'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색신문을 꺼내 들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색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색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적 색신이 "정부와 야당이 민심에 따라서 색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여당 지도부가 의견을 표명할 때는 물밑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정치권의 기존 관례였다는 점에서 한 대표의 공개적인 용산 색신론 제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명태군·김대남 논란'이 야권의

'김 여사 공천개입' 공세에 연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용산 색신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정부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제2부속실 복원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건의할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한 포괄한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벌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전향적 태도로 유인책을 내놓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결과는 여론 전체의 정국 대응 전략과 당정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친윤(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빈손 독대로 귀결된다면 친윤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여야 의원들,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51.8%)이 사라질 수 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50%를 넘어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21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 가운데 78.5%가 청년층이었다. 경제 활동 중심층인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지방의 교통·교육·문화·상업·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해진다. 이는 곧 지방 인구 유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이에 국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균형 발전을 비롯해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위 기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역에 분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시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내용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옛 장항제련소 폐쇄 후 태어난 20·30대, 중금속 오염피해 첫 인정

총 51명 신장병·당뇨병 등 나타나 향후 피해 인정자 수 더 늘어날 듯

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와 관련해 최근 3100여명의 피해자가 인정된 가운데 이 중 만성 신장병·당뇨·천식 등 질환을 겪는 20·30대 51명의 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장항제련소 용광로 폐쇄 이후에 출생한 이들에게도, 중금속 오염 영향 질환이 발현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구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가 건립한 비철금속 제련공장으로, 일제 패망 후 정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1972년 민영화됐으며 지난 1989년까지 용광로가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카드뮴·비소·납 등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 수(9월30일 기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합계
피해자	24명	27명	136명	533명	912명	860명	585명	67명	3441명
비율(%)	0.7	0.8	3.9	15.5	26.5	25	17	2	-

자료:환경산업기술원

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됐는데, 대기·토양에 번진 중금속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 피해로 이어졌다.

13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9월 30일 기준 피해 인정자는 3441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 환경(중금속)오염 피해와 관련 유례를 찾기 힘든 피해자 규모다. 이 중에는 제련소 용광로가 폐쇄된 지난 1989년

후 출생한 세대인 20대와 30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릿지경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해 확보한 '서천지역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구제 연령대 자료'에 따르면 20대 24명, 30대 27명의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됐다.

총 51명에 달하는 20·30대 피해자 중에는 신장 질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1명과 30대 1명이 피해인정

한 중 하나인 만성 신장병이었으며, 이외에 당뇨병, 고혈압, 천식을 비롯해 피부질환 등 질환이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세대별 피해 인정자 수는 40대 136명, 50대 533명, 60대 912명, 70대 860명, 80대 이상 552명으로, 각종 질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현재 4648명에 대한 심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관련해 20대 피해자는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었다"며 "최근 피해가 대규모 인정되는 가운데 20대와 30대 수십 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사랑과 정의’가 실종된 이 시대에 엄중한 화두를 던지다!

‘왜 사랑과 정의인가?’ 화제

흔히 '사랑'이라 하면,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에는 편파적 사랑, 이기적 사랑, 지나친 사랑이 의외로 많다. 여기에는 '정의'가 빠져 있다.

반대로 정의라고 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의에는 적대적 정의, 일방적 정의, 냉혹한 정의가 많다. 여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랑과 정의'가 함께 하여야 비로소 '선(善)'이 완성된다. 품의 정치, 품의 경제, 품의 사회, 품의 문화, 품의 세계 등 모든 분야에서 '공공(公共)의 선(善)'을 지향해야 한다.

저자 **허주회**는 20여 년간 '자유기고가'로, '출간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만나 인터뷰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감성이 묻어나는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 『우리 시대 명사 16인이 들려주는 나의 삶, 나의 아침』, 『자유기고가로 먹고 살기』 등이 있다.

퍼낸 곳 (주)명진씨앤피